

# 최대한 많은 찬성표로 연가 투쟁을 가결시키자!

4.24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전교조를 비롯한 각 부문에서 총투표가 진행 중이다. 이미 투표가 끝난 현대·기아차 등 금속 조합원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다고 한다.

전교조는 오늘(4월 6일)부터 8일까지 연가 투쟁 찬반 투표를 한다. 공무원노조도 4월 6~7일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를 ‘불법’으로 몰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최우선적 국정 과제로 삼는 정부에게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집단 행동 가능성은 원치 않을 뿐 아니라 용납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총투표에서 찬성표가 최대한 많이 나와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그 결과 연가 투쟁의 규모가 커질 때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가 투쟁에 직접 참가할 조합원만 찬성표를 던지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상 연가 투쟁 반대 입장일 뿐이다.

협상으로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을 수 없다. 실무기구 이전에 존재했던 대타협기구도 개악의 폭을 다뤘을 뿐 개악 저지를 위해 기능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실무기구에 들어가 새정치연합을 견인해 연금 개악을 막는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가 않다. 새정치연합 대표 문재인은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매우 용기 있고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를 만나 다시 공무원연금 개악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문재인은 보수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이승만과 박정희 묘소를 참배하고, 최근에는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에 의해 폭침’ 당했다고 말했다. 이런 당이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노후를 방어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의 투쟁만이 공무원연금을 지킬 수 있다. 지난해 11월 1일 공무원 노동자 12

만 명이 모여 연금 개악에 항의하자, 그제서야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이 반대하던 협상의 장(대타협기구)을 열었다.

그러나 전교조가 9년 만에 준비하는 연가 투쟁이 돈 문제라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조합원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금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은 매우 중요하고, 전교조 조합원들은 그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연가 투쟁의 슬로건에 세월호

진실 규명을 포함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세월호 쟁점과 공무원연금 쟁점을 대립시켜, 전교조는 전자를 위해서만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편향이다. 전교조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서도 투쟁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공격은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공격의 시작점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지 못하면 교사·공무원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공적 연금 민영화로 연결될 수 있다. 요컨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은 공적 연금 강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9년 만에 준비하는 연가 투쟁이기 때문에 투쟁 동력을 고민하는 조합원들이 많을 것이다. 동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투쟁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유리한 투쟁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박근혜 정권이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통과를 연일 독려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투쟁 준비가 충분치 못하다거나 여론의 역풍이 우려된다며 수세적으로 후퇴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진지하게 연가 투쟁을 조직하면서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만이 공무원연금 전투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교사들의 노동조건도 겨냥하고 있다

4.24 연가 투쟁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함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주요 요구로 삼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는 민주노총 4.24 파업의 핵심 요구 중 하나다. 전교조가 이를 연가 투쟁의 주요 요구로 건 것은 단지 연대의 의미만이 아니다. 물론 민주노총과 연대해 연가 투쟁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말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공공 부문에서부터 밀어붙이려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과 함께 업무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도 공공부문을 우선적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교사들의 노동조건 악화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5년 상반기 중 성과급-교원평가-근무평정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교원평가 개악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박근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런 일원화 개악은 직무성과급제를 통한 저성과자 퇴출, 이를 통해 해고를 쉽게 하고자 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맞닿아 있다.

또, 직무성과급 같은 임금 체계 개편은 지난 2월 7일 공무원연금에 관한 정부 기초안에도 반영돼 있다. 정부는 기여금 납부 기한을 현재 20년에서 국민연금과 같이 10년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는 공무원연금을 국민

노동시장 구조 개악	교사 부문 해당 사항
저성과자 해고	교평/근평 일원화 → 성과급 → 성과연봉제 → 2진 아웃
비정규직 고용 기간 4~5년으로 연장	정규직 교원 정원 축소, 교사/비교사 비정규직 확대
임금체계 개편	호봉제(10년) → 성과연봉제(10년) → 임금피크제(정년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시간선택제 교사 확대
55살 이상 노동자와 전문 직종 등에 파견 전면 허용	명예 퇴직자와 전문직에 대한 교직 개방으로 학교에도 파견 비정규직 교사 근무

연금화하려는 의도이자, 임금 체계를 호봉제(10년) → 성과연봉제(10년) → 임금피크제(정년까지)로 개편하려는 것과 관련 있다.

박근혜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박근혜가 필사적인 만큼 우리 편도 단호함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그러려면 4.24 총파업과 연가 투쟁이 실질적이 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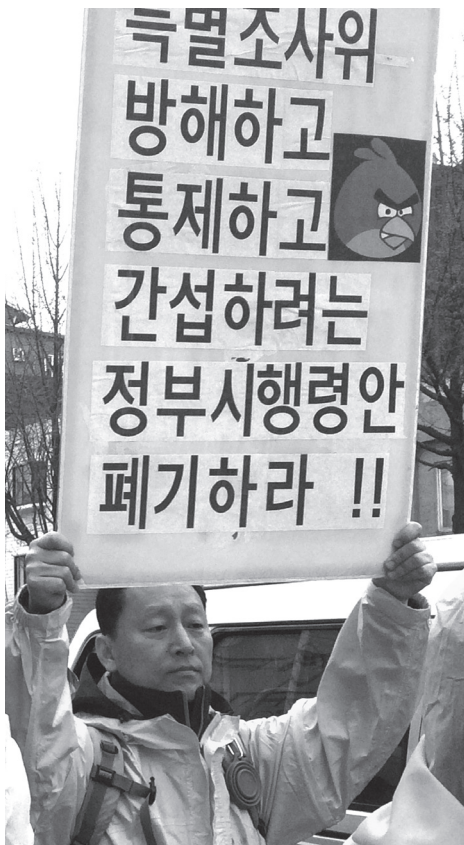


# 세월호 진상 규명을 완전 무력화시킬 시행령 폐기하라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과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결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를 포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빠른 활동 개시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해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3월 27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조사권만 부여된 반쪽짜리 특조위마저 관제 허수아비 기구로 만드는 것이었다. 조사 대상인 행정부의 관료가 특조위에 임명직으로 와서 돈과 인력을 통제하고, 특조위의 진상 규명 범위를 정부와 검찰, 감사원 등이 내놓은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만 하도록 해 놨기 때문이다.

교활하게도, 정부는 시행령에 대한 분노를 물타기 하려고 배·보상금 액수를 발표했다. 그것도 국민성금과 개인이 든 민간보험 금액까지 포함시켜 마치 세금으로 이 모든 돈을 지급하는 듯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유가



족들을 능욕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천억 원이 넘게 드는 세월호 선체 인양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포대당 2조 원이 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배치하려고 하면서(미국은 당연히 한국에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이다), 1천억 원의 선체 인양 비용은 아깝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진상 규명을 필사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세월호 참사가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서는 노동계급과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은 간단히 무시되는 체제가 낳은 비극이기 때문이다. 이 체제의 수혜자들과 통치자들은 이익과 권력으로 유착돼 있다. 박근혜는 이들을 대변한다.

그래서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이 다시금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는 것도, 이것이 민주노총 파업과 연결되는 것도, 4.29 재보선의 쟁점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바닷속에 가라앉힐 수 없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공동 수업, 교사 시국 선언, 16일 지역별 범국민 추모제와 18일 범국민 추모대회(오후 4시 서울 집중)에 적극 참가하자. 바람직하게도, 4월 24일 전교조 연가 투쟁의 요구 중 하나가 4.16 진상 규명이다. 세월호 참사가 이윤 경쟁 체제에서 비롯한 비극이라면, 이윤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윤 생산을 멈출 수도 있는 잠재력을 지닌 노동자들이 그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크게 일어나면 그 다음 주에 있을 민주노총 파업과 전교조 연가 투쟁도 긍정적으로 고무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최대한 크게 일어나 진실을 묻으려는 박근혜의 시도가 좌절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 조합원과 전교조 조합원들이 그 운동에 적극 동참하자.

공투본이 공동 투쟁 기구가 아니라 양보 교섭의 수단이 돼 버린 지금,

## 집행부는 공투본을 탈퇴해 투쟁 속의 단결을 구축해야

3월 28일 교사·공무원 8만 명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 그런데 바로 전날 공무원노조·공노총·교총 지도부가 '더 내는 방향으로의 고통분담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개악안 마련을 위해 여야는 대타협기구의 연장선인 실무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연금 전투의 길을 뚫는 일이었다.

이날 집회에서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실무기구 참여 여지를 남겨둔 발언이었다. 이충재 위원장이 연설할 때, 연단 앞에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활동가 30여 명이 이충재 위원장의 양보 교섭 시도에 반대하는 팻말 시위를 벌였다. 팻말에는 “실무협의체 참가 말고 함께 투쟁합시다”, “우리는 집행부의 양보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구호가 적혀 있었다.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로 앞둔 3월 25일 전교조 지회장 51명이 공무원노조 지도부에게 ‘대타협기구를 탈퇴해 전교조와 함께 싸우자’고 호소하는 입장을 공개 발표하기도 했다.

실무기구에 참여해 새정치연합을 견인해 연금 개악을 막겠다는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생각은 몽상이다. 실무기구의 목적은 구체적인 개악안을 만드는 것이다. 시한도 정해져 있다.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4월 23일이 데드라인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날

은 민주노총 파업과 전교조 연가 투쟁 딱 하루 전이다. 박근혜 정권은 협상의 모양새를 갖춰 개악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는 한편, 4월 파업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 집행부가 실무기구 참여를 거부한 것은 옳다.

다만, 집행부에게 주마가鞭(走馬加鞭)일 수도 있는 고언(苦言) 한 가지를 드리고 싶다. 전교조 집행부가 공투본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를 제외한 나머지 공투본 대표 단체들은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다. 3월 30일에는 공투본 명의로 실무기구

에 당사자 참여를 요구했다. 대다수 공투본 대표 단체들은 공투본을 연금 개악을 막기 위한 공동 투쟁 기구가 아니라 양보 교섭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투본을 탈퇴하면 공무원노조와의 공동 투쟁이 어려워지고 투쟁 동력도 감소할 거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투본은 이미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공노총과 교총은 양보 교섭을 하자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협상과 투쟁의 병행을 말하지만, 실천에서는 양보 교섭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투쟁을 강조한다. 서

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결만 강조하면 투쟁력이 마비될 것이다.

반대로 전교조 지도부가 위험한 동맹들과의 분열을 감수할 때 진정으로 투쟁 속의 단결을 이룰 가능성이 생겨날 것이다. 전교조 집행부가 공투본을 탈퇴하면서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동요(사실상 양보 교섭으로 기울어져 있다)를 비판한다면, 공무원노조 내 투쟁을 원하는 조합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 되면 연금 전투의 방향이 양보 교섭에서 투쟁 쪽으로 바뀔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 4월 24일 연가 투쟁, 서울 상경 집중이 효과적이다

전교조는 4월 24일 연가를 내고 서울로 상경해 1박 2일 집중 집회와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역별 분산 집회를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지역별 분산 집회를 하면 조합원들이 늦게라도 참가할 수 있고, 지역에서 함께 파업을 조직한 다른 민주노총 작업장이 지역 집회를 하기 때문에 전교조만 서울로 상경하는 게 연대를 훼손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경우에는 민주노총 파업 집회 자체가 서울 상경 집중이어야 했다.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파업 집회라면 모를까, 그런 규모가 아니라면 최대한 서울 상경 집중 집회를 하는 것이 파업의 시위 효과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4월 파업을 부담스러운 한 노조 지도자들이 파업의 시위 효과를 감소시킬 지역별 분산 집회를 요구해달 효과적인 투쟁 방식으로 결정됐다.

그러므로 전교조 지도부가 서울 상경 집중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옳다. 게다가 사용자들의 이윤을 직접 타격하는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정치적 시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서울 집중 집회를 하는 경우와 여러 지역으로 분산해 집회를 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이번 연가 투쟁 규모는 수천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분산 집회를 한다면 각각 수백 명 규모밖에 안 될 것이고, 그리 되면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 효과가 대폭 감소할 것이다. 당연히 우리 스스로 힘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반면, 상경 집중 투쟁은 적어도 수천 명이 참가해 시위 효과를 키울 수 있고, 따라서 지역별 분산 집회보다 참가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북돋는 데서 더 유리할 것이다.